

보도시점 2024. 3. 19.(화) 국무회의 시작(10:00) 이후 배포 2024. 3. 1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인구정책 평가·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마련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 변경 -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 (수탁 가능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하였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

구분	평가지침 수립	자체평가 완료	평가완료
기존	-	3월 말	-
개정	1월 15일	2월 말	5월 31일

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안 제5조제1항 개정)

* (8개 정부부처의 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 법제처장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였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 + 법제처 차장

<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안 제1조의2 제1항 개정)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 1.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요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3. 첫만남 이용권 개요

< 별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저고위 기능강화	과 장	이윤신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서기관	김웅년	044-202-3690
		인구아동정책관	첫만남 이용권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출산정책과		사무관	이진우	044-202-3397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 평가센터 등	과 장	고상현	02-2100-1234
		인구변화대응과		사무관	조성현	02-2100-123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①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필요성

-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일괄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환류 강화**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3.3.28.)」 발표 시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등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강화 방안을 포함

- 인구정책 평가·환류 시 외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예정

② 인구정책평가센터 주요 수행 업무

- ①시행계획 평가, ②심층평가, ③장기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④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⑤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 등의 조사·연구 업무 수행

구 분	기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	개 선 (인구정책평가센터 수행)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 연구용역 활용 ▶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합성 검토 등 거쳐 확정 ※ 대상 과제가 방대하고 인력 부족으로 기관 평가 결과 단순 취합 수준에 불과	▶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성과(outcome) 중심으로 개편 ▶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심층평가	(신 설) *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 대상 사업 발굴 및 중장기 심층평가 수행 -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수행 ▶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장기전망 및 대응 전략 수립	(신 설)	▶ 미래 사회·경제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 전략 수립 ▶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개입 영향 등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신 설)	▶ 인구정책 주요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관 간 데이터 연계하여 지표 개발·생산 ▶ 세부지표 모니터링 실시 및 수시 평가 - 계층별, 지역별 분석 등 수시 실시하여 정책 작동 과정의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	▶ 연구용역 활용,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인식 조사 실시	▶ FGI, 인식·실태조사 등 국민인식조사 실시 ▶ 정책 수요 반영 아젠다 발굴

붙임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책	구분	비고
1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연직	
2	부위원장(간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직	상근
3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4	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당연직	
5	위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당연직	
6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당연직	
7	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당연직	
8	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당연직	
9	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당연직	
10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	당연직	추가
11	위원	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직	
12	위원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위촉직	
13	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위촉직	
14	위원	고영호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위촉직	
15	위원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위촉직	
16	위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위촉직	
17	위원	김태욱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원	위촉직	
18	위원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	위촉직	
19	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위촉직	
20	위원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위촉직	
21	위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위촉직	
22	위원	정철영	서울대학교 교수	위촉직	
23	위원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위촉직	
24	위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위촉직	

□ 운영위원회 명단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책	구분	비고
1	공동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직	
2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직	
3	공동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4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당연직	
5		오석환	교육부 차관	당연직	
6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당연직	
7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당연직	
8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당연직	
9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당연직	
10		김창범	법제처 차장	당연직	추가

□ 추진 배경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월)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과제로 “아동 출생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첫만남 이용권)” 지급 추진('22년 시행)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국가책임 강화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첫째아 200만,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지급
- (사용처)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 (지원기간)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출생일로부터 2년 까지 사용
- (전달체계)

